

김지웅 사무관 (02-2100-1725)
유미리 사무관 (02-2100-1737)
김민수 사무관 (02-2100-1788)

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

가.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

- (개정사항)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 금액*을 2,000만원 이상 (현행)에서 1,000만원 이상으로 개정

*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 (한화 약 1천만원)

<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주요내용>

-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 (예시: 입금)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 (예시: 출금)가 대상 (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)

<보고대상·非대상 거래 예시>

보고대상 O	보고대상 X
현찰의 입·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	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

-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“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”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 (검·경, 국·관세청 등 8개 기관)에 정보를 제공

※ '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 ('06년 5,000만원 이상 금융거래→'08년 3,000만원 이상)하였으며, '10년 이후 2,000만원을 유지

<구체 사례 예시>

거래 사례	보고대상	비고
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<u>물건대금(1,200만원) 이체</u>	X	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·영수가 없음
甲이 乙에게 물건대금 (1,200만원)을 자신이 보유한 <u>현금</u> 으로 지급	X	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
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,200만원 <u>수표로 인출</u>	X	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

나.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

- ☐ (개정사항) 그 간 他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*에 대해 의무를 부과

*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하여 부과

- 다만,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 (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)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*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,

*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 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옴

-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*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

* 대체정보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

- ☐ (고시개정 주요 내용) 시행령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정보의 종류를 정함

- 대체정보는 성명, 생년월일, 성별 및 계좌번호 등임

3 향후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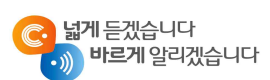
- ☐ (시행령 개정) 공포 후 '19년 하반기 (7.1일)부터 시행

- ☐ (관련 고시 개정) 입법예고 ('19.4.22. ~ 5.13.) → 규개위·법제처 심사 → 금융위 의결 → 시행 ('19.7.1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